



## 조류인플루엔자 제대로 알면 두려울 것 없어

가상시나리오를 토대로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관련보도가 연이어 지면서 양계업계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나 농가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체계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본지 주최로 지난 17일 개최된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양계산물 안전성과 소비대책 모색을 위한 긴급간담회’에서 수의전문가 및 양계업계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최근 언론들이 보여주는 행태는 지난 ‘03년 국내 발생 초기와 다를바 없다”고 지적,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김재홍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질병연구부장은 “막대한 인명피해를 가져올수 있다는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현존하지 않으며 WHO의 경고도 가능성이 적더라도 미리 대비하자는 차원”이라며 “그러나 언론에서는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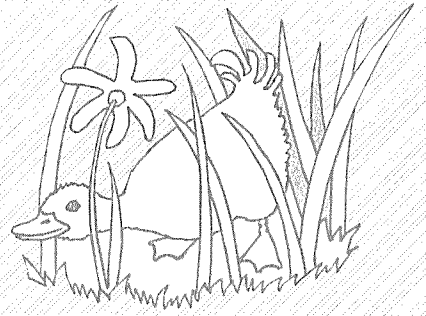
그는 이어 “국내에서는 H5N1 타입의 바이러스가 존재하지 않는 만큼 육회를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을 뿐 만 아니라 설령 유입된다고 해도 사람에게 전염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며 “이같은 상황에 ‘양계산물을 가열해 먹으면 안전하다’는 식의 언론보도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종명 수의공중보건학회장 역시 “과학자입장에서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존재한다면 이를 부인하기 힘들다는 특성을 언론에서 감안치 않고 있는 것 같다”며 최근 언론의 보도 추세에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소비자시민의 모임 강광파 상임이사는 “정부와 언론이 언제까지 소비자들을 공포로 몰아넣을지 의문”이라면서 “하지만 구체적인 정황이나 소비자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모두 입을 다물고 있는 실정”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은 특히 ‘1918년 수천만명의 인명피해를 일으킨 스페인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 타입과 똑같다’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오보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해명 노력 조차 이뤄지지 않는데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따라서 최근 소비가 급감하고 있는 양계 산물 소비홍보대책에는 다소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시각을 보이면서도 조류인플루엔자와 양계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고 정확한 정보전달이 이뤄

질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는데 입장을 같이했다.

아울러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정보전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축산신문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의결

### 지자체별 양분 공급현황 고려 가축 사육제한... 적정두수 유지

앞으로는 가축 사육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사육제한 등의 관리가 이뤄지며, 지자체별 양분 공급현황을 고려한 적정한 두수의 가축사육을 해야 된다. 또 환경친화적축산농장으로 지정되면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정부는 지난 8일 차관회의를 열고, 농림부와 환경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내년 상반기중에 이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해소와 가축분뇨의 이용촉진을 위해 축산폐수의 정의를 '가축분뇨'로 용어를 변경하는 한편 지자체별로 가축분뇨 관리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환경부 장관(농림부 장관 협의)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가축분뇨 시설을 자원화시설과 정화시설로 구분 운영토록 하고, 자원화시설은 액비 살포에 필요한 초지 또는 농경지 확보와 정화시설은 가축분뇨 분리·저장시설을 의무화했다.

가축분뇨의 부적정 처리에 대해서는 시설명령 및 허가를 취소토록 하며, 정화처리 시설 설치농가에 부과하던 배출부과금을 과태료로 전환, 관리를 강화했다.

퇴·액비 사용자인 경종농가의 신뢰확보를 위해 검증된 가축분뇨 퇴·액비 공급체계를 마련, 품질을 관리토록 했으며, 액비

살포시 민원발생 방지 등을 위해 필요시 살포기간을 설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축분뇨 퇴비·액비 유통협의제도 구성 운영토록 했다. 축산신문

## 농지법 개정 입법 취지 공감

**국회 농해위 법안심사소위, 희망 남기고… 다음 국회서 재심의 ‘결론’**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축사를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지법개정안에 대해 농림부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입법취지에는 공감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 국회에서 더욱 보완된 개정안을 재심의키로 해 축산인들에게 한 가닥 희망을 주고 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우남의원)는 지난 25일 이명수 농림부차관을 비롯 관계관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회의를 열어 농지법개정안을 놓고 심의를 벌인 결과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서 다음 회기 소위에서 심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이명수 차관은 “조일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농지법개정안에 대해 입법취지는 찬성한다”면서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와 법체계상의 기술적인 문제 등이 있는 만큼 이 부분이 해결되면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병엽의원(열린우리, 경기 화성)은 “농촌이 도시화되면서 축산을 하는 농민이 갈 곳이 없게 됐다”며 “농지에 가서

축산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승환의원(한나라, 부산 금정)과 김명주의원(한나라, 경남 고성·통영)은 “법 체계상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문제 부분을 정부에서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이처럼 정부와 국회가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는 만큼 다음 국회에서는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이날 참석한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축산업계에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고 다음 회기로 넘긴 것에 대해 아쉬움과 유감을 표시하면서 혹시 농지법개정을 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내비치며 다음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축산물의 안전관리와 수입산과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영업자에게 닭·오리고기 등의 축산물을 포장하여 유통·판매하게 하는 내용의 축산물가공처리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HACCP관리 기준원 설립과 관련해서는 기관명을 법상에 명시하지 말고 임의 규정으로 두기로 했다. 축산신문

## 시피해 농가 세제 혜택

### 국세청, 세금 납기 연장 징수 유예 조치 등

국세청은 지난 15일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피해를 본 축산농가 및 음식점 등의 국세납부기한이 최장 9개월간 연장된다.

국세청(청장 이주성)은 AI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관련업계의 안정을 빠른 시일내에 극복할 수 있도록 세법에서 정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세정지원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서 밝힌 세정지원 대상은 닭, 오리 등을 사육하는 양계농가(7,000여명) 및 이들 품목을 취급하는 오리구이, 치킨집 등 음식점을 운영하는 납세자들이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12월 이후 신고·납부해야 하는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주며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도 징수를 유예조치하고 관련된 납세담보의 제공도 면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간 유예하고 부가가치세 등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법정 환급기일까지 미루지 않고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내년도 소득세 신고에 적용되는 경비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소득세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용 자산이 30%이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비율에 따라 현재 미납되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게 된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자 중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향후 해당업체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피해기간에 대한 손실정도를 충분히 감안하여 조사업무를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축산신문

## 시피해 농가 세제 혜택

### 국세청, 세금 납기 연장 징수 유예 조치 등

국세청은 지난 15일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피해를 본 축산농가 및 음식점 등의 국세납부기한이 최장 9개월간 연장된다.

국세청(청장 이주성)은 AI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관련업계의 안정을 빠른

시일내에 극복할 수 있도록 세법에서 정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세정지원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서 밝힌 세정지원 대상은 닭, 오리 등을 사육하는 양계농가(7,000여명) 및 이들 품목을 취급하는 오리구이, 치킨집 등

음식점을 운영하는 납세자들이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12월 이후 신고·납부해야 하는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주며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도 징수를 유예조치하고 관련된 납세담보의 제공도 면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간 유예하고 부가가치세 등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법정 환급기일까지 미루지 않고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내년도 소득세 신고에 적용되는 경비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소득세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용 자산이 30%이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비율에 따라 현재 미납되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게 된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자 중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향후 해당업체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피해기간에 대한 손실 정도를 충분히 감안하여 조사업무를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축산신문

## 열린우리당, 가금축산물 시식회 소비촉진 캠페인 개최

열린 우리당은 최근 조류인플루엔자 과잉보도로 인해 닭고기 소비가 감소되고 가격이 하락돼 양계농가의 어려움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마당에서 가금 축산물 시식회 및 소비촉진 캠페인을 벌였다.



농수축산신문

## 가금육 소비홍보 TV광고 실시

농림부·A비대위, 광고 제작돌입...23일부터 방송계획  
 닭고기 소비홍보를 위한 TV광고가 오는 23일부터 공중파 TV를 통해 방송될 예

정이다. 농림부와 AI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최준구)는 지난 12일 제너시스 본사 회의실에서 TV 광고 제작을 위한 TV광고 제작에 돌입했다. 이날 광고대행사 선정안 AI

비대위는 곧바로 제작에 들어가 국내산 닭고기와 오리고기의 안전성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특히 제작기간이 짧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광고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작하기로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소비자들이 AI와 관련 막연한 오해로 인해 닭고기, 오리고기 소비가 감소했기 때문에 이 같은 오해를 불식시키는 동시에 절대 가금산물을 먹어서 인체에 감염될 위험성은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로 했다. 축산신문

### 농림부, 가금축산물 소비촉진 캠페인

농림부는 지난 1일 명동 밀리오레 광장에서 가금축산물 안전성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국내 AI(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느끼는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등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대한의사협회,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가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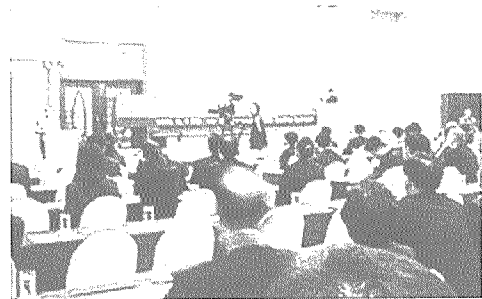
농협중앙회, 대한양계협회, 치킨외식산업협회, 한국계육협회, 한국오리협회 등으로 구성된 조류인플루엔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행사에 맞춰 20억원 AI(조류인플루엔자)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발표했다.

AI 배상책임보험은 국내에서 닭고기 및 오리고기를 먹고 AI에 감염된 사람이 있을 경우 최고 20억원의 보험금을 배상한다.

농수축산신문

### “조류인플루엔자 호도 말라” 육계농가 세미나서 기습시위

전국육계농가연합회와 토종닭연합회 등 양계농가들은 지난 8일 서울 시청 앞 프라자 호텔에서 열린 ‘조류독감 인체에 방백신 개발에 관한 세미나’에 참석해 “백신 개발은 자유지만 국내에서 아직 발병하지도 않은 질병을 과대 포장해 양계농가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한 농가가 세미나가 시작될 때 조류독감이라는 말을 조류인플루엔자로 정정하고 사죄할 것을 요구하자 세미나를 주최

한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관계자가 현수막을 내리고 있다. <사진>

이 날 세미나는 농가 저지로 사실상 무산됐다. 농수축산신문

## 조류인플루엔자 선정정보도 ‘발끈’

### 농가·업계, 항의시위 등

<속보>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언론의 선정적 보도에 대해 닭과 오리를 사육하는 농가와 관련업계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17일 오후 전국토종닭연합회 회원 30여명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모의원이 지난 국정감사 때 질병관리본부에서 만든 조류인플루엔자 가상 시나리오를 발표, 토종닭 사육농가가 파탄에 빠졌으며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항의 시위를 벌였다.

농가들은 “가상 시나리오를 발표하는 바람에 언론이 선정적인 보도로 일색, 닭고기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었다”며 ▲판로가 막

힌 토종닭 전망을 정부가 수매할 것 ▲질병관리본부장과 해당 의원의 사퇴 ▲이를 보도한 언론사의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전국 양계관련 농협 조합장들도 과잉보도를 자제할 수 있도록 주요 언론사를 방문,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어 18일에는 농협중앙회·대한양계협회·한국계육협회·한국오리협회·치킨의식사업협회·계단유통협회·토종닭연합회 등 닭·오리 관련 7개 생산자단체가 긴급 회의를 열고 언론의 추측·과잉보도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각 단체별로 역할을 분담해 대응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 턱없이 낮은 피해액 산정기준 ... 얼어붙은 ‘농심’

### 축사 주저 않아 자식같은 닭·오리 동사... 조류인플루엔자 파문 얹힌 데 폭설 덮쳐

“복구할 엄두도 안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젠 눈만 봐도 진저리가 난다는 양계농

가 정병은씨(46·전북 고창군 성송면). 이번 서해안 일대에 집중적으로 내린 폭설로 정씨의 계사 2동(700평)이 모두 무너져 내렸다. 피해액만도 2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정씨는 “첫눈이 내린 4일 하룻밤 사이 눈이

무릎까지 찰 정도로 내리자 결국 축사가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아버렸다.”면서 “8일 병아리를 입식할 예정이었는데...”라며 아직까지 내리는 눈을 원망했다.

정씨는 현재 무너진 계사를 복구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쌓인 눈을 치워봐야 매일 내리는 눈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 눈이 이번 주말까지 이어질 것이란 기상청 예보에 정씨는 하늘이 해도 너무한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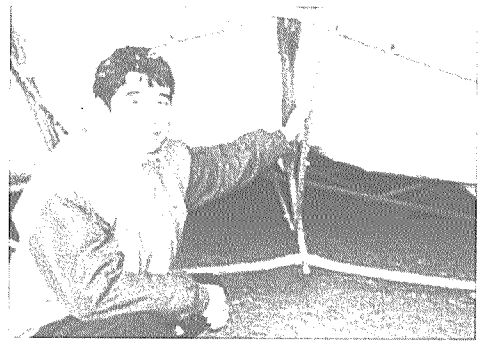
정씨는 복구비 마련도 수월치 않다고 한다. 대출이 한도에 이른 상황이어서 복구를 위해 다시 대출을 받기도 힘들다는 것. 정부의 지원대책을 기대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면사무소에서 피해 상황을 조사했으나 과연 복구비가 나올지 의문”이라는 정씨는 축사를 다시 지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융자금만 지원해주면 영농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씨는 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한 언론보도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분개했다. 정씨는 “언론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보도가 나간 뒤 닭값이 떨어지는 바람에 9월 이

후 병아리 입식을 하지 못해 난방기를 가동하지 않았다가 이런 봉변을 당했다”면서 “폭설피해를 당한 인근 양계농가도 주로 계사가 비어 있어 난방을 하지 않다가 무너져 내렸다”고 강조했다.

인근의 오리농가 오재성씨(47·고창군 무장면)도 사정은 마찬가지. 이번 폭설로 축사 2동(4,000평) 가운데 1동이 붕괴되는 피해를 입었다. 오씨는 “5년간 오리를 키워왔지만 이번처럼 한꺼번에 많은 눈이 내리는 것은 처음”이라며 “복구비 대출도 어렵지만 복구를 한다고 해도 내년 봄이나 가능해 1년 농사를 망치게 됐으니 당장 대출금 갚을 일이 걱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정병은씨가 연일 내리는 눈 때문에 복구는 엄두도 안 난다며 폭설로 무너져 내린 뒤 방치된 계사를 가리키고 있다.

## 폭설 피해지역 300억 긴급지원

정부, 특별복구대책 발표...농가 저리대출  
폭설피해를 당한 광주·전남북 지역의 농가가 최고 1,000만원까지 농업경영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에 각각 100억원씩 모두 300억원의 자금이 긴급 지원된다.



# i Duck's News

소방방재청은 13일 농림부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폭설피해 조기수급을 위한 특별복구대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지원되는 농업경영자금은 기존에 대출받은 영농·양축자금과 관계없이 연 3%의 저리로 추가 대출이 가능하며, 농가당 피해율이 30% 이상일 경우 기존에 대출받은 영농·양축자금의 상환기간이 피해율에 따라 1~2년간 연기되고 이자도 감면된다. 비닐·철재파이프 등 비닐하우스 복구용 농자재도 농협을 통해 외상으로 우선 공급된다.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에 대해서는 국세 납부기간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세금 체납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 집행도 최장 1년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주택·선박·기계장비가 파손된 농가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등록세·면허세 등 지방세를 비과세로 전환 해주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농협은 폭설피해를 입어 출하가 불가능해진 약정출하사업 참여물량에 대해 계약 미이행에 따른 위약금을 면제해 주고 피해시설과 시설 내 농작물의 철거비

용을 지원하는 등 복구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피해가축 방역소독 등에 필요한 방역약품 및 자재 공급 ▲피해농가의 공제금 신속지급 등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내년부터는 자연재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이 일반재해 수준으로 크게 완화된다. 소방방재청은 그동안 피해액과 이재민 수로 정하던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시·군·구의 재정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내용으로 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보통세·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합산액이 100억원 미만인 시·군·구는 피해액이 35억원 이상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 또 재정규모가 850억원 이상일 경우 피해액이 95억원을 넘으면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시·도의 경우 1조 5,000억원 이상의 피해 또는 3만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시·군·구는 3,000억원 이상의 피해와 8,000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해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피해지역 주민과 정치권 등으로부터 지나친 기준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 호남 등 폭설피해액 3,700억원 육박, 전남만 1,500억 넘어

### 폭설피해 농업시설에 집중

호남, 제주와 충남 서해안 지역을 강타한 폭설피해 규모가 3,700억원대 육박하는 것

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남도 등 해당 지자체들에 따르면 26일 오전 7시 현재 집계된 피해액은 전남

2,018억원, 전북 1,270억원, 광주광역시 236억원, 충남 127억원, 제주 35억 1,700 만원에 이르고 있다.

게다가 하우스나 축사 지붕에 쌓인 눈이 녹으면서 붕괴가 이어지고 있어 본격적인 피해 조사에 들어가면 피해 규모는 4,000

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폭설피해는 농업시설에 집중돼 전남에서만 비닐하우스 피해가 655억원, 축사붕괴 피해 638억원, 표고버섯 등 버섯사 피해 89억원, 기타 농어관련 피해 140억원 등 모두 1,522억원에 달하고 있다.

## 야 4당 “특별재난지역 선포하라” 정부압박

### 정부·정치권·농협 폭설피해 복구 ‘총력’

사상 최악의 폭설 피해가 발생한 전남북과 서해안지역을 중심으로 눈이 그친 24일부터 피해복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피해지역이 워낙 넓은 데 반해 인력·장비는 턱없이 부족해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농협 등의 피해복구 움직임이 종합한다.

#### ■ 정부

정부의 피해복구 대책은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응급복구와 복구지원 계획수립이 그것이다. 눈이 그치고 기상상황이 호전된 만큼 정부는 앞으로도 민·관·군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물 복구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노후주택 시설물 점검과 수리를 위한 전담반을 편성, 운영에 들어갔다.

다음은 복구계획 수립이다. 정부는 26일까지 이번 폭설 피해와 관련된 중앙합동조사를 끝낸 상태다. 이 피해조사를 바탕으로 복구계획안을 마련, 오는 30일 중앙재난안

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복구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복구계획에는 특별재난지역 지정 여부가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폭설 피해농가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복구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내년 초 곧바로 소요 예산을 집행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농림부는 폭설 피해지역에 대해 이달 말까지 예정돼 있던 공공비축재의 포대벼 수매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라 폐업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시설포도·키위·복숭아 농가 가운데 이번에 폭설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우선 순위를 조정, 먼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 ■ 정치권

요즘 각 당의 최대 화두는 ‘폭설 피해 지원’이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공식적으로는 정부와 입을 맞춰 폭설 피해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지원’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세균 의장은 23~24일 폭설

피해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엄청난 피해 현장을 직접 보니 너무 안타깝다”며 “폭설 피해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지원을 해주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열린우리당은 또 23일 비상집행위원회를 열어 호남과 제주지역의 폭설 피해 대책을 논의했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이날 박홍수 농림부장관을 참석시킨 가운데 상임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폭설대책 간담회를 가졌다. 여당은 폭설피해 대책마련 등을 위해 국회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한나라당을 압박하고 있다.

한나라당 등 야당은 폭설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26일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루빨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25일 폭설 피해지역을 다녀온 박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피해실태를 조사하느니, 용자를 주느니 할 만큼 느긋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원희룡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호남폭설피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있다.

당 소속 의원 대부분의 지역구가 폭설 피해가 가장 심한 전남지역인 민주당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하며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8일 지역구가 전남북인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함께 폭설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9일에는 최인기 당 재해대책특별위원장이 국무총리와 행정자치부·농림부 장관 등에게 서신을 보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망했다.

이밖에 민주노동당과 국민중심당도 호남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 ■ 농협

계속된 폭설로 큰 피해를 입은 전남북 및 광주광역시 농가와 지역농협을 돕기 위한 농협의 지원 손길이 빨라지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26일 폭설로 무너진 비닐하우스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4억4,000만원을 투입, 정형밴딩기 150대와 파이프로절단기 100대를 구입해 전달기로 했다.

또 축산 피해농가를 위해 배합사료 1만 2,400포대(8,700만원 상당)와 가축약품 등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시설·질병·사양 등 3개 복구지원반을 긴급 편성해 투입하는 한편, 계통출하 지연에 따라 발생하는 위약금은 면제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업인 지원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지역농협이 입은 피해액의 80% 수준에서 복구비를 지원해 줄 계획이다.

농협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지원과는 별도로 중앙회 임직원들이 모금한 2억원 등 모두 4억원의 성금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협은 이에 앞서 이들 피해지역에 농축산경영자금 300억원을 긴급 배정한 바 있다.